

최육진 행정학 2019년 국가직 9급 행정학 총평 및 해설

1.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소견

수험생 여러분 시험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졌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국가직 9급 시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체 문항 중에서 다섯 문항은 ‘수험생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여 본인이 대략 80점 이상이라면 준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래의 표는 본 시험의 ‘영역별 출제빈도와 난이도’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주관임을 밝힙니다.

<영역별 출제빈도와 난이도>

영역별 출제빈도								
총론	정책학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행정환류	지방자치론	제도·법령	신유형
2	4	4	2	2	.	1	4	1
문제별 난이도(아래의 행은 문제의 번호임)								
상			중			하		
4, 5, 10			6, 17			상·중을 제외한 문항		

※ 상·중의 의미: 수험생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

2. 시험문제의 구성

영역별 빈도는 전체적으로 고른 편입니다. 다만, 2019년 사회복지직 시험에 비해 제도 및 법령문제가 조금 더 출제되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정부조직 구성’ 등은 행정학에서 중요한 내용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선거’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모든 수험생이 생소하게 느꼈을 터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는 행정학보다 한국사에 가까운 내용인데 금년에 출제되어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3. 앞으로의 공부방향에 대하여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공부방향입니다. 이는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8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80점 이상을 획득한 수험생은 행정학에 대한 감이 있는 분입니다. 본래 본인이 공부하던 방식대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약한 부분 내지 강사가 지정해주는 어려운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② 75점 미만을 받은 수험생: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쟁률이 치열해짐에 따라 시험도 어려워질 수 있으나 중요한 부분은 늘 중요합니다. 수업 때 알려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암기하세요. 80점, 90점은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익혔을 때 달성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4. 마치는 글

행정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렵고 생소한 과목입니다. 해서 조정점수가 상대적으로 후한 것이며 우리가 행정학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 ②

해설: 이슈네트워크에 비해서 정책공동체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음

구분	철의 삼각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행위자	- 관료+이익집단+의회상임위원회 - 가장 제한적인 참여	- 관료+전문가 등 - 비교적 제한적인 참여	광범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폐쇄성	폐쇄적	폐쇄적	개방적
안정성	안정적	안정적	불안정
행위자 간 관계	동맹관계	1. 의존적이고, 협력적 관계 2. positive-sum game: 정합게임	1. 경쟁적, 갈등적 관계 2. negative-sum game: 영합게임
상호의존성	높음	비교적 높음	낮음
기타	주로 분배정책에서 나타남	1. 뉴거버넌스와 연관된 개념 2. 정책내용 합리성 제고	권력모형 중 다원주의론에 가까움
정책	분야별 정책지배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가능	정책산출 예측곤란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함; 아래의 법 참고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③ **제19조(임용시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7조(기관장의 임용)** ③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이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라 한다)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의 ④번 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④의 내용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임기를 의미하지만 문제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아니라 책임운영기관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임; 책임운영기관은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되며, 각 기관장의 임기는 다르게 명시되어 있음; 아래의 법 참고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 ③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함; 아래의 지방자치법 참고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②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 ① 지시적 위임형
- ② 협상형
- ③ 재량적 실험가형
- ④ 관료적 기업가형

정답: ④

해설: 관료적 기업가형에서 집행가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과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음

※ 관료적 기업가형

- 1) 정책결정자: 형식적인 결정권을 보유
- 2) 정책과정 전반을 통제; 결정권도 행사
- 3) 집행인은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음
- 4) 정책집행 실패의 원인
 - ① 집행의 정보 독점
 - ② 관료의 저항 등

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②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음;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공무원 헌장

[시행 2016. 1. 1.] [대통령훈령 제352호, 2015. 12. 31., 전부개정]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 ① 국가공무원법 1조에서 공익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④ 공익에 대한 과정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간주함

6.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 중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한국연구재단
- ② 국립중앙극장
- ③ 한국소비자원
- ④ 한국철도공사

정답: ②

해설: ①③④는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이며, 국립중앙극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임; 출제자는 국립중앙극장을 정부기업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이기 때문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음; 아래의 설명 참고

※ **정부기업 예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 이와 같은 정부기업 예산법과 아래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종합하면 **책임운영기관 중 특별회계기관의 사업이 정부기업임을 알 수 있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아래와 같이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두고 있음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4조 제1항 제2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의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별표로 첨부하고 있음

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제22조의3제2항 관련)

일반회계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1. 국립국제교육원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 국립생물자원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
2. 통일교육원	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화학물질안전원(「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
3. 국방홍보원	8. 국립중앙극장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4. 국방전산정보원	9. 국립현대미술관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0. 한국정책방송원 등	

7. 엘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 ③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 ④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정답: ③

해설: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가 타협 및 흥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바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음

-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조직전체의 목표를 추구함
-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여 결정함; 엘리슨 모형에서 조직과정모형은 회사모형과 유사함
- ④ 엘리슨은 외교안보문제 혹은 현실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세 가지의 모형을 통해 설명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함; 따라서 외교안보 분석에 있어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함

<Allison 모형>

구분	모형 1: 합리적 행위자모형 (합리모형)	모형 2: 조직과정모형 (회사모형)	모형 3: 관료정치모형 (쓰레기통모형)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용이한 유기체 (조직은 하나의 몸)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인 행위자들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최고 지도자	하위조직	개별적 행위자의 정치적 자원
행위자 목표	조직 전체의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하위조직들의 목표	조직 전체의 목표+하위조직 들의 목표+개별적 행위자들 의 목표
목표의 공유도	강함	약함	매우 약함
정책결정의 양태	최고지도자 결정	SOP에 의한 결정	정치적 게임의 규칙 (타협, 흥정, 지배)
정책결정의 일관성	매우 강함	약함	매우 약함
적용 계층	조직 전반	하위 계층	상위 계층

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 ㄱ.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서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함
-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일반 국민을 보호하려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함
-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함
-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기업에 특정한 유형의 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수단규제에 해당함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③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③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①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답: ①

해설:

- ② 박정희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 시기까지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음; 노태우 정부에서 기초의원 선거는 1991년 3월에, 광역의원 선거는 1991년 6월에 실시되었음
-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영삼 정부에서 1995년 6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음
- ④ 현재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음; 단, 교육감 선거는 예외임

■ 지방선거의 변천

선거회수	선거일	법적근거	선거구분		비고
			지방의원	단체장	
1952년 (제1차)	4월 25일	지방자치법 (국회의원선거준용)	시·읍·면의원	(기초:간선제)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 이승만 정부가 1949에 지방자치법 제정 ㉢ 1952년 6.25전쟁 중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실시 ㉣ 단, 선거가능지역만 실시함 (서울, 경기, 강원제외)
	5월 10일		도의원	(광역:임명제)	
1956년 (제2차)	8월 8일	지방자치법 (국회의원선거준용)	시·읍·면의원	시·읍·면장	6.25 전쟁 종료 후 (이승만정부)
	8월 13일		시도의원	(광역:임명제)	
1960년 (제3차)	12월 12일	지방자치법 (국회의원선거준용)	시도의원	-	4.19 이후 (장면정부)
	12월 19일		시·읍·면의원	-	
	12월 26일		-	시·읍·면장	
	12월 29일		-	시·도지사	
1991년 (제4차)	3월 26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기초의원	(기초:임명제)	30년 만의 지방의회 구성 (노태우정부)
	6월 20일		광역의원	(광역: 임명제)	
1995년 (제5차)	6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제1회 동시선거 (김영삼정부)
1998년 (제6차)	6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제2회 동시선거 (김대중정부)
2002년 (제7차)	6월 1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제3회 동시선거 (김대중정부)
2006년 (제8차)	5월 31일	공직선거법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제4회 동시선거 (노무현정부)
2010년 (제9차)	6월 2일	공직선거법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제5회 동시선거 (이명박정부)
2014년 (제10차)	7월 4일	공직선거법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제6회 동시선거 (박근혜정부)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 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 ①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 ② 사회적 인간관
-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 ④ 복잡한 인간관

정답: ①

해설: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조직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등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수동적인 존재임

※ 샤인(Schein)의 인간관 분류

1)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 ① 인간관: 합리적·이성적·경제적인 존재로 간주
- ②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맥그리거의 X이론 등

2) 사회적 인간관

- ① 인간관: 인간을 사회·심리적 존재로 간주
- ② 인간관계론 및 맥그리거의 Y이론 등

3) 자아실현적 인간관

- ① 인간관: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까지 발휘하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
- ② 도전적 혹은 자기계발이 가능한 업무에 기초하여 동기가 부여됨

4) 복잡한 인간관

- ① 개인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음
- ② 또한 그러한 관리방식도 없기에 개인차를 고려해야 함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기평정법
-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 ③ 중요사건기록법
- ④ 강제배분법

정답: ④

해설: 집중화 경향 내지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정대상자의 종합평정점수 분포가 특정 등급에 쏠리지 않도록 미리 평정등급에 일정한 비율을 강제로 배분하는 방법인 강제배분법을 활용할 수 있음

- ① 자기평정법: 평정대상자에게 자신에 대한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감독자가 모르거나 잊었던 사실을 상기시켜 올바른 평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감독자의 시간적·공간적·인지적 제약을 보완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
-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부하의 참여를 통한 목표설정 후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이후 환류과정을 통해 다음 목표설정에 반영하는 조직관리기법 중의 하나임
- ③ 중요사건기록법: 평정대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관찰하여 평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기록한 후 누적된 사건을 중심으로 평정하는 방법

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 ③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국공채를 활용한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을 후세대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음

- ① 조세를 통해 투자된 자본시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재(free goods)로 인식돼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유재: 존재량이 무한하여 값을 치르지 않고도 획득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원; ex. 공기나 물 등

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정답: ③

해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임

①②위원회 조직은 탈관료제의 한 종류로서 책임의 분산이 특징이며, 의사결정이 다수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짐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함

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 조직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정답: ④

해설: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적인 리더십을 의미함;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에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등이 있음;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는 바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면이 있음

※ 리더십 이론에는 리더의 특징이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특성론, 행동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행태론, 상황에 맞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상황론 등이 있음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 ②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③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 ④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정답: ①

해설: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보상에 대한 기대를 의미함;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는 '유인가'임; 브룸에 따르면 '동기의 강도(M) = f(유인가×도구성×기대감)'에 의해 결정됨; 즉, 기대치·수단성·유인가를 곱한 값이 클수록 강한 동기가 유발됨

②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이원론에 대한 내용임; 허즈버그는 동기를 유발하는 동기요인과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위생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음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④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해설: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임

※ 유연 근무제

- ㉠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 대한민국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과 근무유형을 정해 부서장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유연 근무제 유형

유형	내용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간·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하되, 출근시간 선택 가능 － 매일 같은 출근시간(07:00~10:00 선택) －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간(07:00~10:00 선택)
	근무시간 선택형	1일 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집약근무형	1일 10~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재량근무형	출퇴근 의무 없이 전문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근무제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만 지급, 실적분은 지급 금지)
	스마트워크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기 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불구하고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 참고: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용령 제22조의4 제6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만을 적용한다.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 ① 역할연기
- ② 직무순환
- ③ 감수성 훈련
- ④ 프로그래밍 학습

정답: ③

해설: 감수성 훈련에 대한 내용임;

※ 감수성 훈련

- ㉠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키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려는 훈련방법으로서
- ㉡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서로 진솔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 듣는 방법임 → 상호 간의 교감을 통한 이해 촉진
- ㉢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함; 인위적인 개입없이 자연스럽게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 ②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 ③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 ④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정답: ④

해설: 품목별 예산제도는 입법국가 시절의 예산제도로써 통제지향적인 예산제도임; 즉, 투입 중심 예산편성으로 인해 의회가 통제 및 감독하기가 용이함

- ①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공통점이라는 점에서 MBO와 유사한 제도는 ZBB임
- ②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하는 건 PBS임
- ③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한 예산제도는 PPBS임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정답: ②

해설: ②는 예산의 이용에 대한 내용임;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의 융통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예산은 전용은 행정과목 간의 융통으로 국회의 승인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됨

- ④ 사고이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금액 중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